

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

김형철(성공회대학교)

선거제도의 중요성

- 선거제도(electoral system)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집적하여 이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규칙
- 선거제도는 민주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조정 수단
-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대표성과 책임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제도
-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요구됨

선거제도의 구성요소

- 의석할당방식: 다수제 방식(majoritarian formula)과 비례제 방식(proportional formula)
- 선거구 규모: 일인선거구, 다인선거구(중선거구, 대선선거구, 복합선거구)
- 투표방식: 범주적 투표방식(categorical ballots)과 순위적 투표방식(ordinal ballots)
- 봉쇄조항(threshold): 한 정당이 대표를 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 기준을 의미

선거제도의 유형(218개국)

| 유 형 | 다수대표제 | | | | | 혼합선거 제 | | 비례대표 제 | | other | | No direct electi on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FPT P | AV | BV | PBV | TRS | MM M | MM P | List PR | STV | SNT V | oth er | - |
| 국 가 | 60 27.5 % | 2 0.9 % | 16 7.3 % | 5 2.3 % | 18 8.3 % | 24 11.0 % | 8 3.7 % | 84 38.5 % | 2 0.9 % | 5 2.3 % | 3 1.4 % | 7 3.2% |

출처: <https://www.idea.int/data-tools/question-view/130355>(검색일 2023/01/21)

1위대표제

- **장점**

-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있어 단순 용이
- 지역(선거구) 대표성 보장
-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료
-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, 양당제의 유도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

- **단점**

- 사표(waste votes)의 증대와 소수대표의 문제(정당성 훼손)
- 제조된 과반수(manufactured majority)와 선거불비례성 현상(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)
- 유권자의 선택 제한, 정부교체 시에 정책의 급격한 변화 초래
- 유권자의 선호도 왜곡 심각한 민주성의 결핍(Lijphart 1999, 134)

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

- 절대다수에 의한 당선자 결정
- **장점**
 - 1위대표제의 장점과 함께 대표의 정당성 확보
 -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힘
 - 다당제 하에서 정당 간 연합을 자연스럽게 형성
 - 연합정치에 의한 타협과 협력의 정치문화
- **단점**
 - 투표-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음
 - 시간과 비용의 증가
 - 2차투표시 투표율 저하 및 무효표 증가
 - 무원칙한 연합 가능성

대안투표제

- 선호투표제(preferential voting)의 한 유형
- 유권자의 선호순위를 집계하여 절대다수의 표(50%+1)를 획득한 후보 결정
- **장점**
 - 유권자의 선호 최대한 반영과 소신투표(sincere voting)
 - 소수대표 현상 극복
 - 선거비용과 시간면에서 높은 효율성
 - 무원칙한 연합이나 인위적 조작의 가능성 방지
 - 유권자의 선호도를 통해 정당의 전략과 정책 수립
- **단점**
 - 투표-의식간 불비례성이 높음
 - 선거전에 전략적 투표 유도
 - 무효표의 증가

대안투표제의 승자결정방식

| 후보 | 1순위 득표수 | 다음 계산 | 계산 2 | 다음 계산 | 계산3 | 다음 계산 | 계산 4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가 | 2,028 | +864 | 2,892 | 탈락 | - | - | - |
| 나 | 1,824 | 탈락 | - | - | - | - | - |
| 다 | 29,773 | +562 | 30,335 | +1,628 | 31,940 | +1,035 | 32,975 |
| 라 | 13,681 | +140 | 13,821 | +392 | 14,213 | 탈락 | - |
| 마 | 23,942 | +256 | 24,198 | +872 | 25,070 | +13,174 | 38,244(당선) |
| 이양불가능 표 | | 2 | | 23 | | 4 | |

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

- **장점**

- 사표를 최소화
- 높은 비례성과 대표성
- 정당중심의 책임정치 활성화(높은 반응성과 책임성)
- 연합정치와 합의의 정치문화 촉진
-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안정성 보장

- **단점**

- 군소정당들의 난립과 연립정부에 의한 정치적 불안 초래
- 정치적 거래와 흥정, 밀실야합 등에 의한 유권자 선호의 왜곡
- 정당지도자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과 정당지도자의 권력강화에 따른 정당의 비민주화 초래
-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친밀도 약화

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

-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율이 결정되는 선거제도
- 정당이 제공한 후보명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당선자 결정
- 투표구조에 따른 비례대표제 유형
 - 폐쇄형 명부식(closed list):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이스라엘, 포르투갈, 스페인, 우루과이 등
 - 가변형(부분형) 명부식(ordered list)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네덜란드 등
 - 개방형 명부식(open list): 브라질, 칠레, 핀란드, 페루 등

투표구조에 따른 장단점

| | 폐쇄형 명부 | 가변형 명부 | 개방형 명부 |
|----|--|---|---|
| 장점 | 투표의 용이성 여성 및 소수집단의 대표성 보장 정당중심의 책임정치 | 유권자의 정당 또는 후보 선택권 당선순위 결정 권한 보장 정당 엘리트의 권한 약화 당내 분파성 약화 |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과 당선순위 결정권 보장 정당 엘리트의 권한 약화 |
| 단점 | 정당엘리트의 강한 공천 권한 유권자의 후보 선택 제약(인지성과 대표의 모호성) | 후보(인물) 중심적 성격 존재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약화 가능성 존재 | 후보 중심적 성격이 강함 후원주의와 당내 분파성 조장 정당중심의 책임정치 약화 가능성 높음 |

단기이양식 (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)

- 유권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제도
- 아일랜드, 몰타 의회,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선거에서 채택
- 중선거구 이상의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무관하게 복수의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선호순위를 표시. 집계된 유권자들의 선호가 당선계수(Quota)를 넘을 때 당선자가 결정
- 당선계수는 드롭쿼터(Droop Quota)를 이용
- 드롭쿼터 = $\lceil V/(M + 1) \rceil + 1$

단기이양식 의석배분규칙

| 후보 | 계산 1 | 잉여표 | 계산 2 | 잉여표 | 계산3 | 다음 계산 | 계산 4 |
|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
| 가 | 2,028 | 1000 | 3028 | 100 | 3128 | - | - |
| 나 | 1,824 | 500 | 2324 | 130 | 2454 | - | - |
| 다 | 24,773 | -6961 | | | | | 당선 |
| 라 | 13,681 | 2500 | 16181 | 200 | 18181 | | 당선 |
| 마 | 16,942 | 1500 | 18442 | -630 | | | 당선 |
| 바 | 12,000 | 1461 | 13461 | 200 | 15461 | | |

총유효투표수 71,248표, 당선결정계수 17,812표

$$DQ=(V/M+1)+1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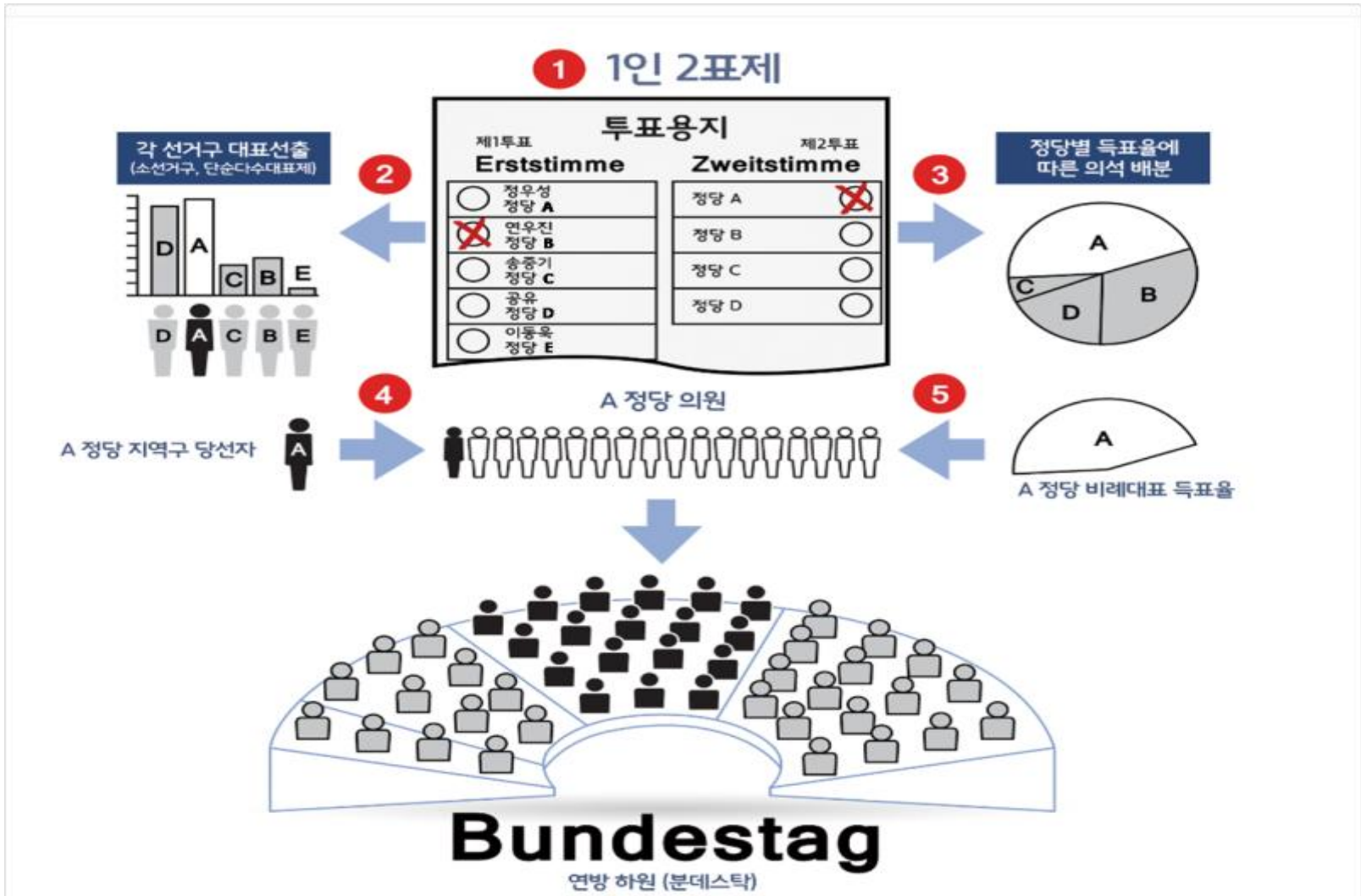
장단점

| 장점 | 단점 |
|---|--|
| <p>유권자의 선호도 최대 반영</p> <p>상대적으로 높은 비례성</p> <p>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 증진</p> <p>이념적으로 다양한 정당체계</p> <p>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부구성</p> <p>유권자의 정치적 선별력 향상</p> | <p>지역구 위주의 의원활동</p> <p>정당 내 후보 간의 경쟁 심화</p> <p>제도의 복잡성</p> <p>선거구 크기가 클 경우 사용 어려움</p> <p>복잡성</p> |

연동형 비례대표제(MMP)

- 유권자들이 행사한 정당명부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률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연동
- 이 방식은 투표-의석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유형에 있어 비례대표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(독일, 뉴질랜드 등 9개 국가)
- 독일 등은 주 단위 / 뉴질랜드는 전국단위

의석배분방식



장단점

| | 장점 | 단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동형 비례대표제 (MMP) | 비례성 사회대표성 지역대표성 책임정당정치 사표의 최소화 | 복잡성 초과의석 발생 전략적 투표 |

초과의석발생 원인

- 거대정당 지지자들이 연립정부 구성을 염두에 두거나
중소정당 지지자들이 사표방지를 위한 전략적 분할투표
(split-ticket voting) 현상
- 지역정당의 존재에 따른 정당득표의석보다 지역구의의석이 많
을 경우(외생적 초과의회)
- 초과의회는 거대정당에게 투표-의석 사이의 이득률을 안겨
주었다.

병립형 다수대표제(MMM)

- 1위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지역대표와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가 산술적인 합산방식을 통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
- 투표-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1위대표제보다는 높지만 비례대표제보다는 낮은 준비례대표제(semi-PR)로 분류
- 한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21개국 사용

장단점

| | 장점 | 단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병립형 다수대표제 (MMM) | 사회대표성 지역대표성 적은 정당분절도 정당 책임성 향상 | 복잡성 낮은 비례성 보궐선거 존재 전략적 투표 |

단기비이양식 (single non-transferable voting)

-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기초로 다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
- 단기비이양식은 다수대표제와 같이 유권자 1인이 1표만을 행사하며
- 현재 하원선거에서 단기비이양식을 선택하고 있고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, 쿠웨이트, 이라크, 바누아트 그리고 피켓언제도 5개국

장단점

- **장점**

- 사표 축소
- 1위대표제보다 비례성과 다원성 상대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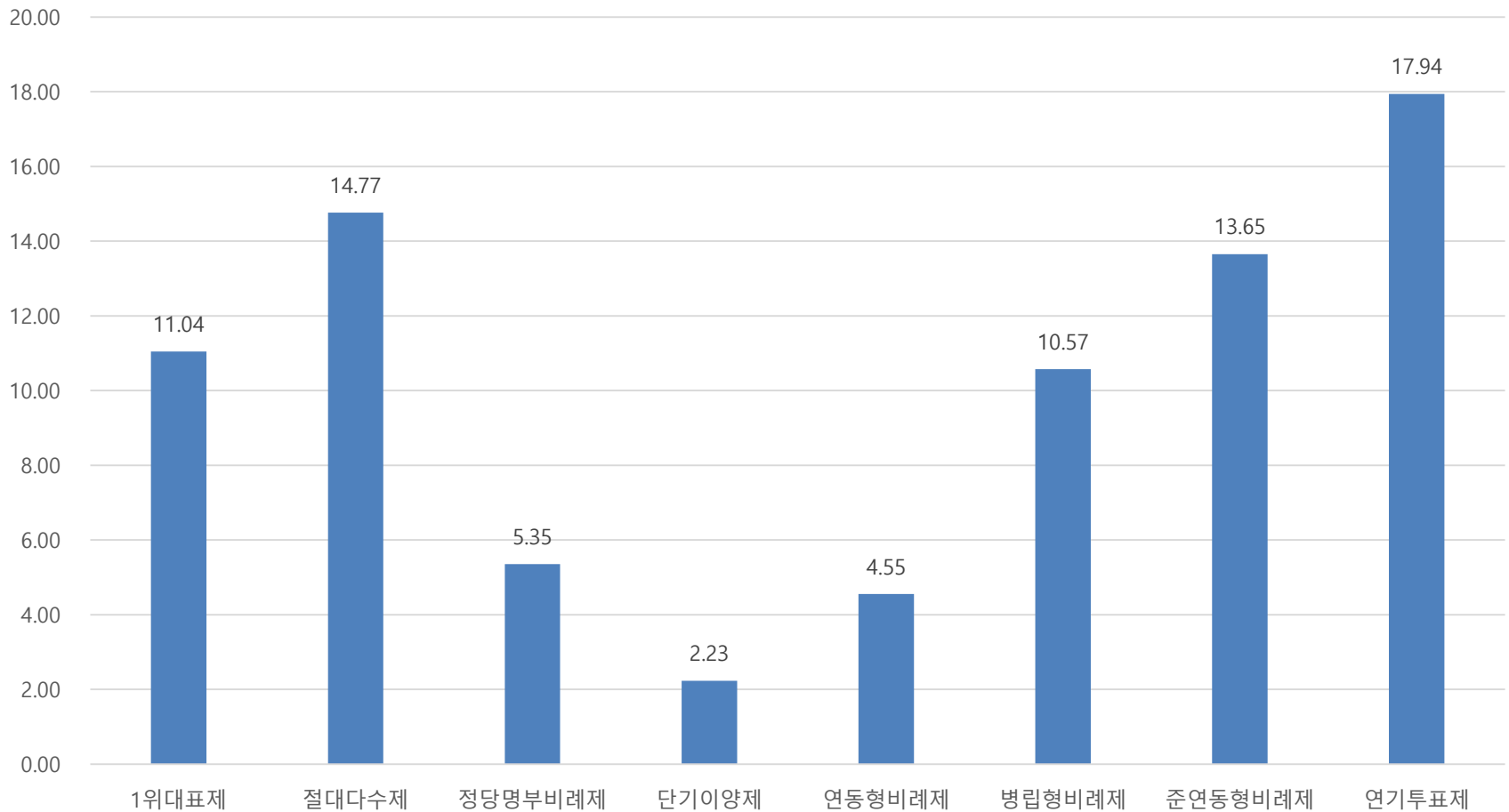
- **단점**

- 비례성을 높이는데 한계
- 복수공천에 따른 정당 내 경쟁 과열
- 정당 내 파벌 조장
- 고비용의 선거와 부정부패의 심각
- 당선자 사이에 '표의 등가성' 또는 '대표성의 왜곡' 문제

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

- 직접적 효과: 비례성,정당의 내부적 결속, 정당 규율, 정당체계의 분절성에 영향을 미침
- 간접적 효과: 다른 정치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질(quality)에 영향을 미침
- 듀베르제의 법칙과 민주주의
- 선거제도->정당체계->민주주의

69개 국가의 선거제도와 불비례성 (EIU의 Full+Flawed D)



선거제도와 민주주의

- 1위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가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
- 온건한 경쟁,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 정당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과 효율성,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 등을 결과

선거제도와 민주주의

-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는 입장은 정치적 대표성, 공평성 그리고 참여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 세력과 반대세력의 이탈(exit)을 방지
- 그 결과로 민주주의 안정성을 보장하며, 오히려 높은 불비례성을 갖는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경향성이 높다고 주장
- 승자독식의 다수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, 정치적 대립과 갈등 심화, 권력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변화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

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수준

| 선거제도 | 1위 대표제 | 결선 투표제 | 대안 투표제 | 비례 대표제 | 단기 이양제 | 연동형 비례제 | 병립형 비례제 | 준연동형 비례제 | 연기 투표제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민주주의 지수 | 7.40 | 8.07 | 8.71 | 7.59 | 8.42 | 8.20 | 7.48 | 8.03 | 8.14 | 7.64 |
| 국가수 | 10 | 1 | 1 | 44 | 2 | 3 | 6 | 1 | 1 | 69 |

선거제도 유형과 여성의원비율

[https://data.ipu.org/women-ranking?month\(2023/2월\)](https://data.ipu.org/women-ranking?month(2023/2월))

| 선거제도 | 1위 대표제 | 결선 투표제 | 대안 투표제 | 비례 표제 | 단기 이양제 | 연동형 비례제 | 병립형 비례제 | 준연동형 비례제 | 연기 투표제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여성의원 비율 | 23.44 | 37.80 | 38.40 | 33.38 | 25.50 | 37.20 | 18.12 | 19.10 | 20.00 | 30.42 |
| 국가 수 | 10 | 1 | 1 | 43 | 2 | 3 | 5 | 1 | 1 | 6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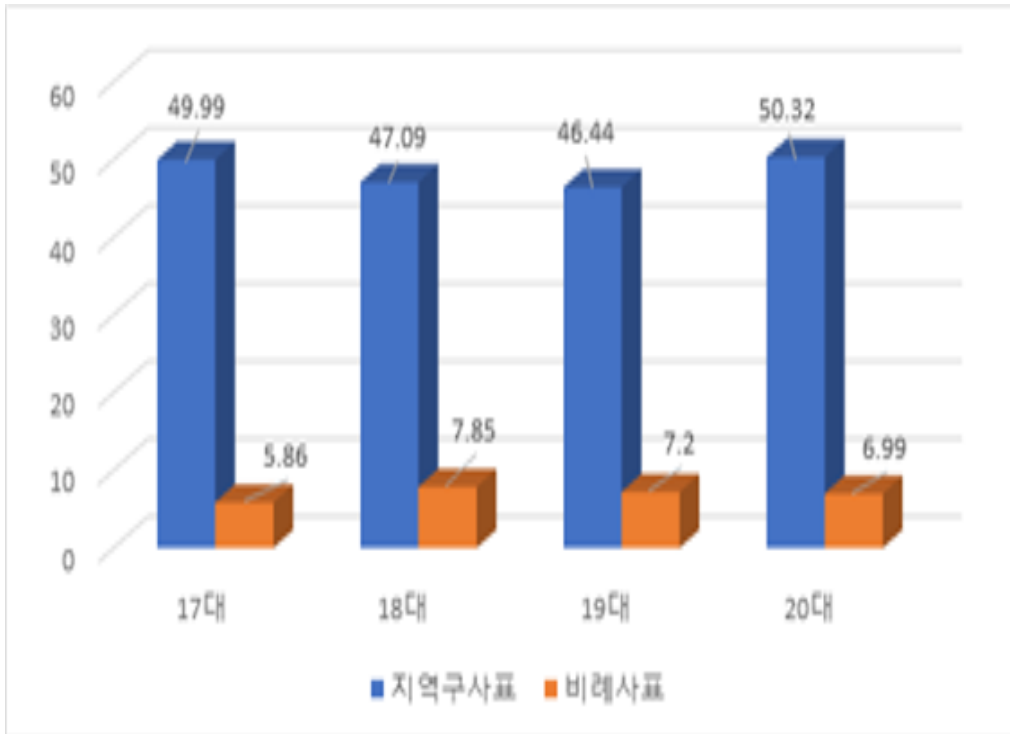
한국 선거제도 변화

| 연도 | 주체 | 국회의원선출방식 |
|------|----------|--|
| 1948 | 미군정 | 선거법 공포, 1위대표제 |
| 1963 | 국가재건최고회의 | 1위대표제+전국구(제1당에 2/3배정) |
| 1972 | 비상국무회의 | 2인선거구 단기비이양식+대통령추천제(유신정우회) |
| 1980 | 국가보위입법회의 | 단기비이양식+전국구(제1당에 1/2배정) |
| 1988 | 민주화 | 1위대표제+전국구(제1당의 지역구의석이 50%미만일 경우 전국구 50% 배정, 그외 정당 의석을) |
| 1992 | 국회 | 1위대표제+전국구(의석율에 따른 의석배분) |
| 1996 | 국회 | 1위대표제+전국구(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) |
| 2000 | 국회 | 299석 -> 273석 |
| 2004 | 국회 | 1인 2표 혼합형다수대표제 (243+56) |
| 2008 | 국회 | 299석(245+54) |
| 2012 | 국회 | 299석->300석(246+54) |
| 2016 | 국회 | 300석(253+47) |
| 2020 | 국회 | 준연동형비례대표제(253+47) |

현행 선거제도의 특성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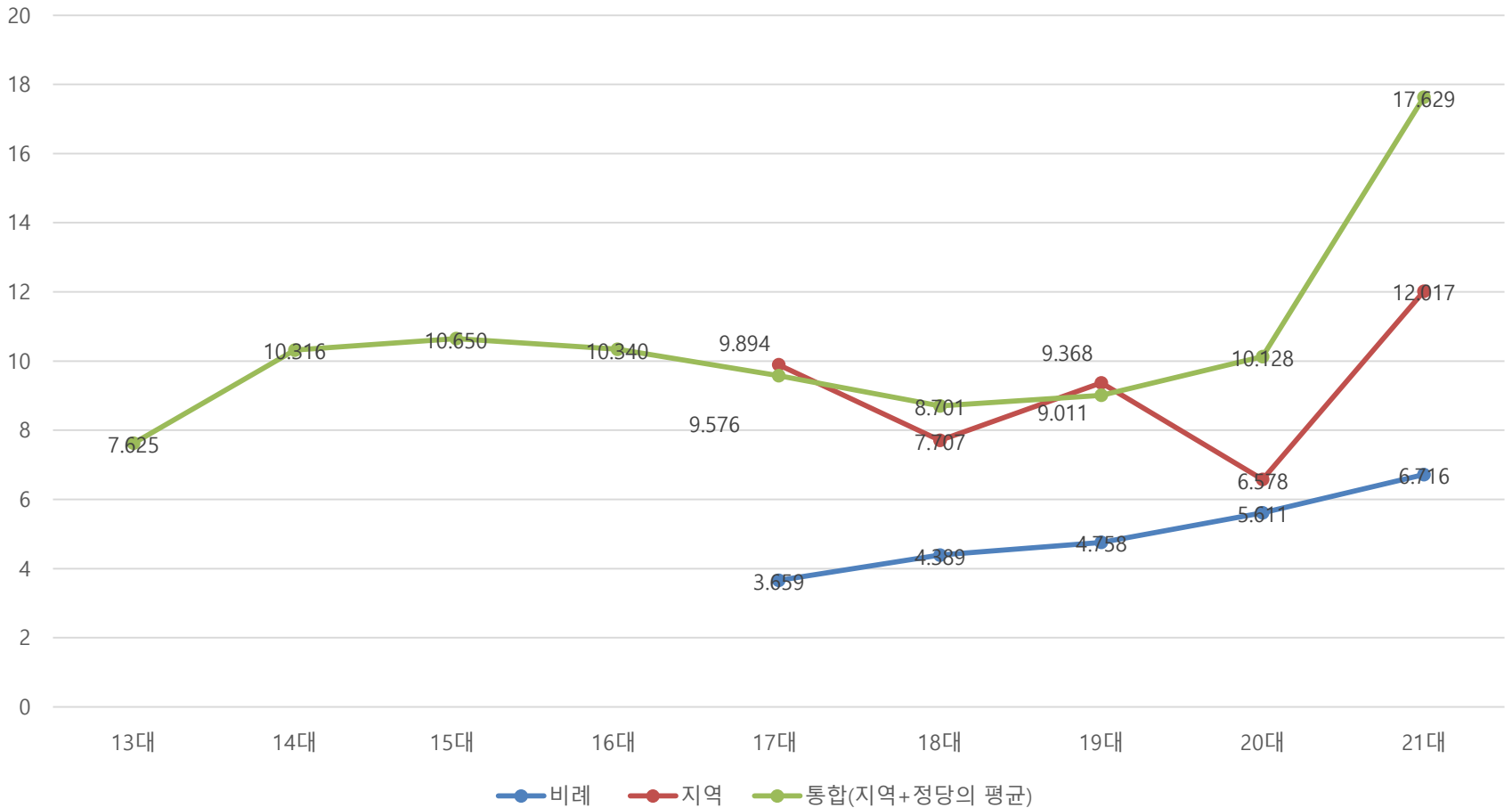
| | 기존 선거제도: 병립형 | 개정 선거제도: 준연동형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투표구조 | 1인 2표 | 1인 2표 |
| 총의석수 | 300 | 300 |
| 지역구의석 수: 비례대표의석 수 | 253 : 47 | 253 : 47 |
| 봉쇄조항 | 전국득표율 3% 이상 또는 전국 5석 이상 당선 | 전국득표율 3% 이상 또는 전국 5석 이상 당선 |
|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 | 총유효투표수를 총의석수로 나누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|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%만을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 |
| 제21대 총선에서의 한시적 적용 | - | 30석 연동형 캡(cap) 적용 |

총선 사표율 변화(17대~20대)



- 21대 지역구 사표율은 43.73%
- 선거인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.76%로 약 63%의 유권자는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함

민주화 이후 선거불비례성



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별 이득율

| 정당 | 지역 | | | | 비례 | | | |
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
| | 득표율 | 의석수 | 의석율 | 이득율* | 득표율 | 의석수 | 의석율 | 이득율* |
| 더불어민주당 | 49.91 | 163 | 64.43 | 1.29 | - | - | - | - |
| 더불어시민당 | - | - | - | - | 33.35 | 17 | 36.17 | 1.08 |
| 미래통합당 | 41.45 | 84 | 33.2 | 0.80 | - | - | - | - |
| 미래한국당 | - | - | - | - | 33.84 | 19 | 40.43 | 1.19 |
| 정의당 | 1.69 | 1 | 0.4 | 0.23 | 9.67 | 5 | 10.64 | 1.1 |
| 민생당 | 1.44 | 0 | 0 | - | 2.71 | 0 | 0 | - |
| 국민의당 | - | - | - | - | 6.79 | 3 | 6.38 | 0.94 |
| 열린민주당 | - | - | - | - | 5.42 | 3 | 6.38 | 1.18 |
| 무소속 | 3.91 | 5 | 1.98 | 0.51 | - | - | - | - |
| 기타 | 1.6 | 0 | 0 | - | 8.22 | 0 | 0 | - |

출처: 김형철 2020, 90.

*이득율 = 의석율 ÷ 득표율

한국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

-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정 목적

“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
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,
지방소멸 대응·지역주의 완화·다양성을 증진”

-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

- 사표 축소
- 비례성과 대표성(정치 다양성)의 강화
-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
- 위성정당 출현 방지

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(가)안

- 2월 22일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실 산하 '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 위원회'(이하 자문위)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정안을 결의안으로 제출
 - △소선거구 병립형 비례대표제(비례의석 50석 증가)
 - △소선거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(비례의석 50석 증가)
 - △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
- 3월 22일 현행 의원정수(300명)를 유지하는 세 가지 선거제도 개정안을 담은 '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'을 정개특위 의결
 - △중대선거구(도농복합선거구제) 권역별·병립형 비례대표제
 - △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전국·병립형 비례대표제
 - △소선거구제 권역별·준연동형 비례대표제

선거제도 개정의 주요 쟁점

- **선거제도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**
 - 중대선거구제 도입
 -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
 - 개방명부형 도입
 - 의석할당방식 변경: 병립형 회귀, 연동형 또는 순수비례 대표제 도입
 - 의원정수의 확대 또는 비례의석 확대
- **위성정당의 억제**

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유와 문제점

- 중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 결합된 단기비이양식
- 중선거구제 주장 이유:
 - ① 소선거구제보다 비례성이 더 높고 사표 감소
 - ② 군소정당의 후보에게도 선출될 기회를 제공
- 문제점
 - ① 불비례성(다수대표제에서 선거구의 규모는 반비례의 관계 파렐 2012; 레이프하트)
 - ② 복수공천에 따른 파벌(계파)정치와 경쟁 심화
 - ③ 고비용의 선거정치 유인과 정치부패의 심화
 - ④ 의원들 사이의 '표의 등가성' 왜곡

전국단위와 권역단위

- **전국단위 비례대표제: 네덜란드, 이스라엘 등**
 - 장점: 사표감소 및 비례성 강화
 - 단점: 후보자 정보와 '선거구 대표 정치인' 인식 부족, 후보-대표 간 거리(대안으로 지역단위 명부작성)
- **권역단위 비례대표제: 스웨덴, 덴마크, 벨기에 등**
 - 장점: 지역대표성 보장과 후보자 인지
 - 단점: 사표 및 불비례성 증가
- **다계층선거구: 선거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 조정**
 - 첫번째 층위의 사표 및 잔여표를 합해 두번째 층위 등 이양
 - 최대잔여제의 경우 잔여표 이양(오스트리아 그리스 등) 또는 수정 생라귀식의 조정의석 방식(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총의석의 11~20%)

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점

- **장점**

- 영호남에서의 특정정당의 의석독점 완화
- 중앙집권적 후보공천 권한 분산

- **단점**

- 지역적 이익의 과다대표와 비례대표의 취지 약화
- 전국을 단위로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 권역단위로 8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비례성은 낮아짐
-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보다 권역단위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사표의 발생이 많아짐
- 단 순수비례대표제를 실행한 경우, 지역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개방형 명부 대 폐쇄형 명부

- **개방형 명부의 장점과 한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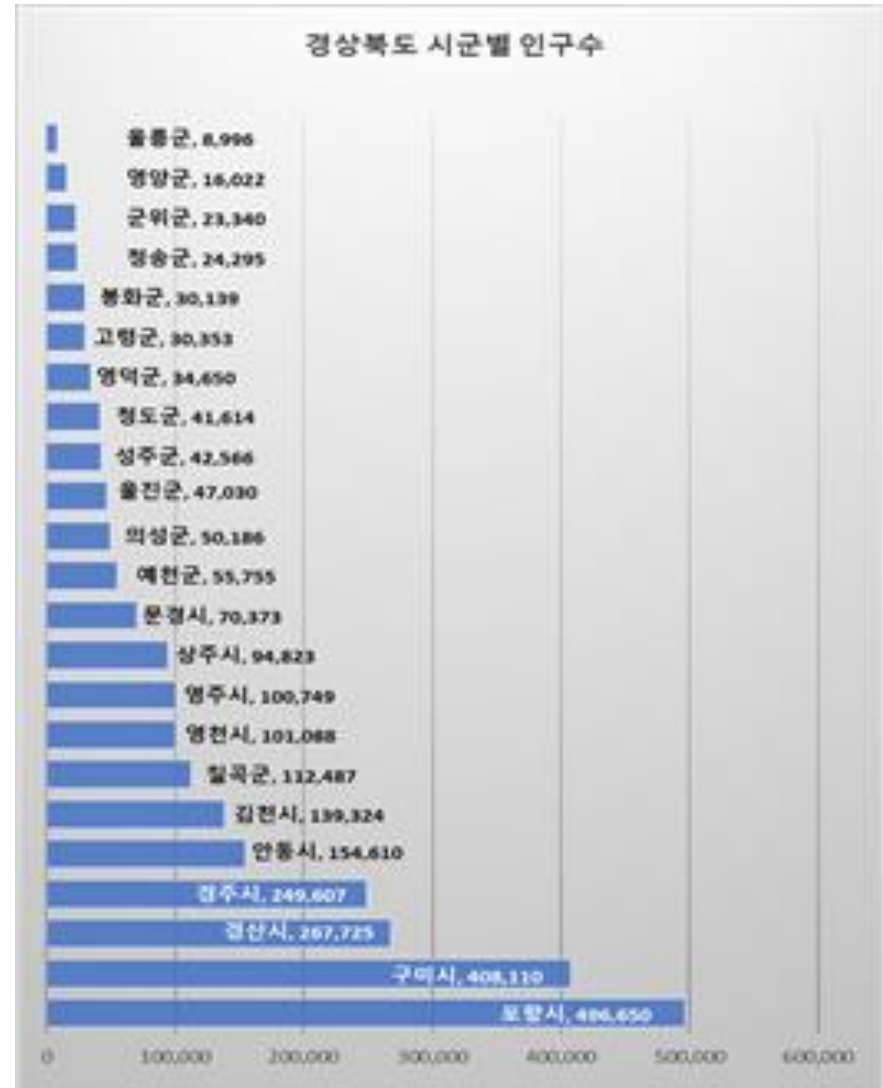
-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
- 전국단위로 47명의 비례후보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비교해서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
- 비례대표의 취지인 여성, 세대, 직능, 노동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움
-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이 아닌 인물이나 연고주의 중심의 유권자 선택을 유도

- **폐쇄형 명부제의 장점과 한계**

- 여성, 세대, 직능, 노동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집단 대표
- 정치신인의 의회진출에 용이
- 전국단위로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하면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의원 보장
- 유권자의 선택 제한과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발생

권역단위 개방형 명부제의 한계

- 권역단위로 개방형 명부제를 할 경우는 권역 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(대전, 대구, 광주 등)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,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짐



비례대표의석 확대를 위한 의원정수 증가

-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석이 총의석의 $\frac{1}{4}$ (25%)이상이어야 함(Taagepera and Shugart 1989)
- 비례의석 확대 방안은 지역구의석 감소 또는 의원정수 증가
- 의원정수 증가의 필요성
 - 의원1인당 국민의 수를 줄임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 확대
 - 국회의원 특권 축소 효과
 -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
 - 비례성 확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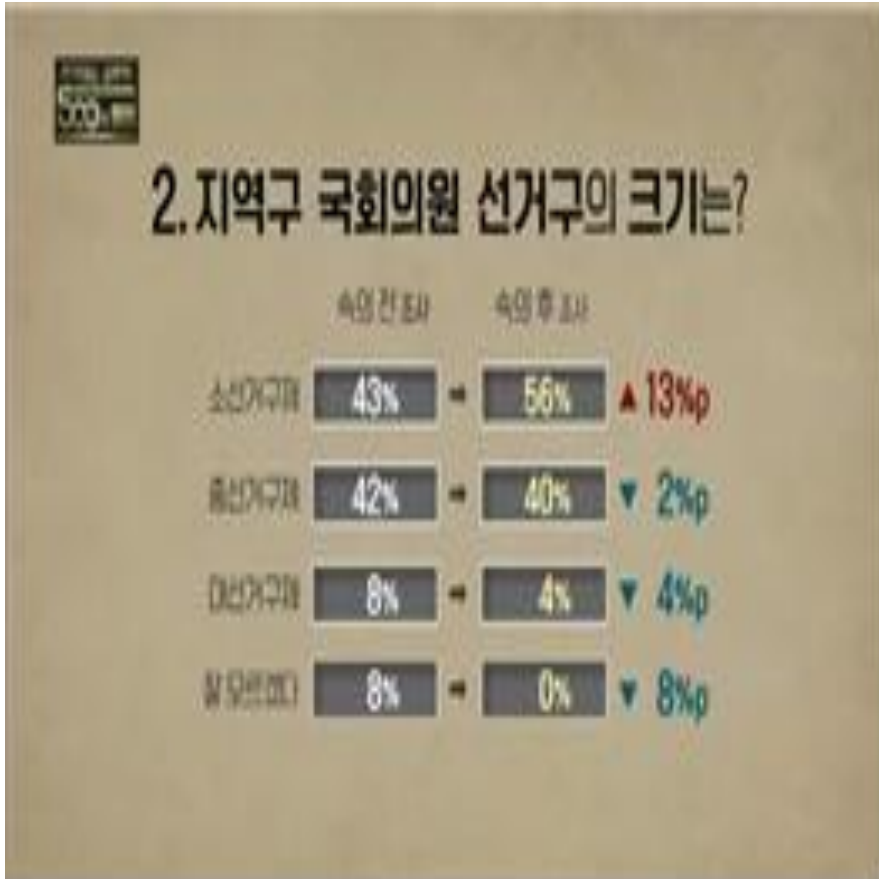
의원정수와 민주주의의 관계

| | | VA | PS | GE | RQ | RL | CC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원 1인당 인구수 | 상관 계수 | — .146** | — .442** | .038 | -.005 | — .146** | — .173** |
| | N | 728 | 728 | 727 | 728 | 728 | 728 |
| 비례대표 의석비율 | 상관 계수 | .161** | .111** | .199** | .181** | .073* | .195** |
| | N | 728 | 728 | 727 | 728 | 728 | 728 |

이중등록제 도입과 석패율제

-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후보 동시 등록
- 일본의 석패율제의 문제점
 -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: 비례대표제의 취지 왜곡
 - 인물과 지역중심의 선거경쟁 및 정당정치를 지속
 - 정치신인의 의회진출 어려움

공론조사 결과



공론조사 결과



결론: 선거제도개혁 방안

- 선거제도 개정 방향은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위성정당의 등장을 제한하는 것
 - 지역구의석 수와 비례의석 간 격차 축소
 -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정 필요
(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로)
 - 비례대표 수의 증가에 따른 부분개방 명부형 도입 필요
 - 혼합형 선거제도일 경우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
 - 의원정수 증가
 - 국민의 참여 확대 필요